

中國의 대내개혁 동향과 대한반도정책 전망

- 9期 全人大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

1998. 4

신 상 진

(통일환경연구실 연구위원)



민족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

I . 문제제기	1
II . 江澤民 중심의 신지도체제 확립	3
1. 江澤民체제 공고화	3
2. 지도부 세대교체	5
III . 대내 개혁정책 가속화	8
1. 정부기구 개혁	8
2. 국유기업 개혁	12
3. 금융체제 개혁	14
4. 제한적인 정치개혁	16
IV . 중국의 한반도정책 전망	19
1. 평화·협력지향적 외교노선 견지	19
2. 두 개의 한국정책 추진	20
V . 고려사항	23

I. 문제제기

- 중국은 제9기 全國人民代表大會(全人大)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 (3.5~19)하여 2003년까지 중국을 이끌어 갈 신지도부를 구성하고, 2000년까지 추진해 나갈 국무원 기구개편안과 경제개혁안을 심의·비준하였음.
- 또한 중국은 「政府工作報告」를 발표, 1998년 한해동안 추진해 나갈 행정개혁과 경제개혁·개방정책 및 대외정책 노선을 확정하였음.
 - 9기 전인대 제1차 전체회의는 15차 당대회(1997.9)와 15기 2중전회(1998.2)에서 결정된 공산당의 지도방침을 심의·비준하고 당대회와 당중앙위에서 결정된 지도부 인사개편안과 대내외정책 노선을 최종 확정하였음.
- 따라서 이번 전인대는 21세기 초까지 중국의 내부정세와 대외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회의임.
 - 특히 1988년 이래 가장 큰 폭의 지도부 인사개편안과 개혁·개방정책이 채택된 후 가장 강력한 정부기구 개혁방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전인대는 향후 중국의 대내외 정책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임.

- 이와 관련, 본 보고서에서는 9기 전인대 제1차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인사개편안과 대내외 정책방안을 기초로 중국의 대내개혁 동향과 대한반도정책을 분석·전망하는 동시에, 우리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II. 江澤民 중심의 신지도체제 확립

- 금번 전인대에서 국가주석·부주석,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위원, 국무원 총리·부총리, 각부 부장 및 전인대 상무위원장 등의 인선안이 비준되었는 바,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江澤民체제 공고화

- 江澤民은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재차 선임되었는 바, 이를 계기로 江澤民의 권력기반이 더욱 공고하게 구축될 수 있게 되었음.
 - 江澤民은 2003년까지 국가주석직을 맡게 되며, 그 이후에는 헌법규정에 따라 물러나야 함.
 - 국가중앙군사위는 실질적으로 당중앙군사위와 동일한 기구로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고 의결기구임.
- 14차 당대회시 당서열 3위로 江澤民의 최대 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전인대 상무위원장 喬石이 정치무대에서 은퇴하였다는 사실은 江澤民의 활동공간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당서열 2위인 李鵬이 국무원 총리에서 물러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전인대 상무위원장에 선출되었는 바, 이 점도 江澤民체제 강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임.

- 親江澤民계로 분류되는 溫家寶(부총리), 張萬年(중앙군사위 부주석), 曾培炎(국가발전계획부장), 陳至立(교육부장), 俞正聲(건설부장), 張文康(위생부장)이 전인대에서 권력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으며, 賈慶林(北京시장)과¹⁾ 李長春(廣東省 당서기)²⁾ 등이 전인대 개최직전 요직에 발탁되었음.

- 또한 14차 당대회와 8기 전인대 당시 군부에 대한 江澤民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선임되었던 劉華清과 張震이 국가중앙군사위 부주석에서 물러났다는 점도 군부에 대한 江澤民의 지지기반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국가중앙군사위 부주석으로 張萬年과 遲浩田이 선출되었는 바, 張萬年은 江澤民에 의해 상장으로 진급된 군부 실세이며, 국방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遲浩田도 江澤民 지지자임.

- 아울러 江澤民이 鄧小平과의 차별화를 조심스럽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江澤民의 권력 장악력이 확고하다는 것을 반증함.
 - 江澤民은 鄧小平 사망 1주기에 행한 발언에서 “과거 중국의 지도자가 중국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고 밝혔다.³⁾

1) 江澤民의 측근인 賈慶林은 1997년 8월 北京市 당서기로 부임하였으며, 이번 전인대 개최 이전인 1월 21일에는 北京市 시장에 임명되었음.
 2) 정치국원 李長春은 전인대 개최 직전인 3월 2일자로 중국내 최대 경제력을 가진 廣東省의 당서기에 임명되었음.
 3) “President Jiang Seeks to Step Out of Deng’s Shadow,” <http://www.csis.org/analysis/president-jiang-seeks-to-step-out-of-deng-s-shadow>

- 鄧小平은 대담한 국유기업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으나, 江澤民은 국유기업 주식합작제를 추구하고 있음.
 - 鄧小平은 대미 대결회피전략을 전개하였으나, 江澤民은 미국과 21세기를 지향한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음.
- 이로써 江澤民은 자신의 후원자였던 鄧小平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2003년까지 중국을 이끌어갈 권력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게 되었음.
- 毛澤東시기 과도한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로 앞으로도 중국의 주요 정책결정은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간 합의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나,⁴⁾ 당·정·군내에서 江澤民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2. 지도부 세대교체

- 정부 지도자의 연소화와 전문화를 통한 국정능률 극대화가 이번 전인대 지도부 인사개편안이 지향한 주요 특징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바, 부장 65세 정년 원칙에 따라 고령의 간부가 퇴진하고 신세대 전문관료들이 대거 승진·발탁되었음.
- 이번 전인대에서 선출된 국무원 부서장의 평균연령이 57.7세에 불과함.

[//www.insidechina.com/china/news/03.html](http://www.insidechina.com/china/news/03.html)

4) 정치국 상무위원은 江澤民, 李鵬, 朱鎔基, 李瑞環, 胡錦濤, 尉健行 그리고 李嵐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4세대 지도부의 선두주자인 胡錦濤(56세)가 국가부주석에 선출되었는 바, 이는 2003년 개최되는 10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으로 발탁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볼 수 있음.
 - 헌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2003년 초 중국은 새로운 국가주석을 선출해야 함.
- 溫家寶(부총리), 陳至立(교육부장), 李德洙(국가민족사무위주임), 許永躍(국가안전부장), 何勇(감찰부장), 項懷誠(재정부장), 宋德福(인사부장, 연임), 石廣生(대외무역경제합작부장) 등 50대 간부들이 대거 정부 요직에 진출하였음.
- 1988년 이래 외교부장직을 담당해 온 錢其琛이 물러나고, 상대적으로 연소한 唐家璇(60세)이 신임 외교부장에 발탁되었음.
- 중국인민해방군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중앙군사위원의 평균연령도 73세에서 68세로 낮아졌음.
 - 張萬年, 遲浩田, 傅全有, 于永波, 王克, 王瑞林은 풍부한 전투 경험과 군사이론·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바, 국가중앙군사위원의 연소화가 결코 자질저하를 초래하지 않음.⁵⁾
- 고학력을 지닌 기술관료의 부상도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인사개편안의 주요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음.

5) “新一屆中央軍委評析,” 「文匯報」(香港), 1998. 3. 18.

朱鎔基 총리, 李嵐淸, 吳邦國, 錢其琛, 溫家寶 부총리 등은 모두 대학 교육을 받은 전문관료들임.

Ⅲ. 대내 개혁정책 가속화

- 중국은 전인대 개막 당일 발표하는 「政府工作報告」에서 당해 연도의 대내외 정책방침을 제시하는 바,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의 개혁정책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것임.
 - 비효율적인 정부기구 정비
 - 부실 국유기업 개혁
 - 금융체제 개혁

1. 정부기구 개혁

-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래 3차(1982년, 1988년, 1993년)에 걸쳐 대대적으로 정부기구 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정부의 개혁의 지 약화와 각 부서의 부처이기주의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 결국 정부기구의 비대화와 관료주의의 병폐 누적은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불만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개혁정책 추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 이에 따라 중국은 15차 당대회시 국무원 기구개혁의 임무와 방침을 제시하고, 15기 2중전회시에는 당중앙위원들이 모여 「국무원 기구개혁방안」을 논의·통과시켰음.

- 당중앙에서 통과된 개혁방안이 이번 전인대에 상정되어 비준되었는 바, 국무원 기구개혁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될 것임.⁶⁾
 - 정경유착의 병폐 차단, 관료부패의 척결 및 생산·경영효율 제고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기능을 분리함.
 - 국가재정 적자 축소를 위해 과도한 인원과 비대한 기구를 감축·정비하고, 실물경제 부서를 조정·축소함.
 - 부서간 직책·권한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유사직능을 통폐합함.

- 이러한 국무원 기구개혁 원칙에 따라 중국은 금년 말까지 41개 중앙부처를 29개 부처로 축소·조정하고, 2000년까지 8백만명의 중앙부서 관리중 1/2을 감축할 것이라는 혁신적인 방안을 밝혔음.
 - 현재 중국에는 중앙 당·정관리가 8백만명에 이르며, 각급 사업단위와 교육·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행정인원은 3천 3백만명에 달하는 실정임.⁷⁾

- 이번 전인대에서 통과된 국무원 기구 개편안은 다음과 같음.
 - 22개 존속부처: 외교부, 국방부, 공안부, 국가안전부, 검찰부, 민정부, 사법부, 재정부, 인사부, 건설부, 철도부, 교통부, 수리부, 농업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문화부, 위생부, 국가경제부

6)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는 羅幹, “關於國務院機構改革方案的說明,” 「文匯報」(香港), 1998. 3. 7 참고.

7) “China to Cut Four Million Civil Service Jobs,” <http://www.insidechina.com/china/news/01.html>

역위원회,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국가계획생육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계서

- 4개 신설부처: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 노동·사회보장부, 국토자원부(지질광산부, 국가토지관리국 및 국가해양국 통합), 정보산업부(郵電部, 전자공업부, TV관리부문 통합)
- 3개 개명부처: 국가발전계획위원회(국가계획위원회),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과학기술부(국가과학기술위원회)
- 13개 폐지부처: 전력공업부, 석탄공업부, 야금공업부, 기계공업부, 전자공업부, 화학공업부, 국내무역부, 郵電部, 노동부, 廣播電影電視部, 지질광산부, 임업부, 국가체육운동위원회(중화전국체육총회로 기능 이관)⁸⁾
- 이외에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는 국무원 행정체제에서 독립, 국무원 고위 議事機構로 운영

○ 정부의 기능 전환도 이번 정부기구 개혁이 지향하는 주요 목표의 하나인 바, 향후 중앙정부는 국가재정 투자 항목만을 심사하고 다른 항목은 투자자가 직접 심사·결정하도록 할 방침임.⁹⁾

-
- 8) 이들은 대부분 실물경제 관련 부처들로서 국단위로 축소, 공기업으로 재편하여 정부와 기업간 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고자 함. 매탄공업부는 국가매탄공업국으로, 기계공업부는 국가기계공업국으로, 야금공업부는 국가야금공업국으로, 국내무역부는 국가국내무역국으로, 경공업총회와 방직총회는 국가경공업국과 국가방직공업국으로 축소되고, 이들은 모두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관할하에 편입됨. 화학공업부는 국가석유화학공업국으로 편입되고, 임업부는 국가임업국으로 축소되었으며, 전력공업부는 국가전력공사로 재편되게 되었음.
 - 9) 이는 각급 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동시에, 정부 관리의 부정 부패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것임.

- 이전에는 5천만元(人民幣) 이상의 에너지·기간시설 항목에 대한 투자와 3천만元 이상의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를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 상기 금액 이하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는 지방정부가 담당하였음.¹⁰⁾
- 한편, 금번 정부기구 개혁작업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인맥과 연고에 의한 정실인사 관행을 불식시키고 공무원 공개채용을 더욱 확대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것임.
- 중국은 1993년 「국가공무원 잠정조례」를 채택하여 공채를 실시, 1997년 말까지 5만 6천여명의 관리를 선발하여 중앙과 지방부서에 배치하였음.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부터 縣, 鄉, 鎮 단위의 말단 공무원까지 공채를 통해 선발, 젊고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에 걸맞는 공무원 사회를 조성할 예정임.
- 이번에 추진될 중국의 정부기구 개혁작업의 범위가 방대한 바, 개혁과정에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일부 부서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음.

10) 「文匯報」(香港), 1998. 1. 26.

2. 국유기업 개혁

- 중국내 전체 기업종사자의 57%를 고용하고 중국 국가세수의 74%를 부담하는 국유기업은 방대한 잉여인력 보유와 경영의 비효율로 인하여 중국정부의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¹¹⁾
 - 중국내 국유기업은 약 30%의 잉여 노동력을 지니고 있는 상황임.
 - 43.4%에 이르는 국유기업이 적자상태에 놓여 있음.

- 더욱이 중국의 국유기업들은 경영난 악화로 기업 상호간 막대한 연쇄채무(三角債)를 지고 있으며,¹²⁾ 중국내 은행에 대한 국유기업의 대출잔액이 2조元(1元 = 8.3달러)에 달하여 부실 국유기업의 폐해는 금융위기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¹³⁾

- 따라서 중국은 국유기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개혁을 1998년 정부 중점 사업으로 채택하였음.

11) 吳邦國, “統一認識,進一步辦好國有企業,” 「求是」, 1995年 第3期 (1995. 2. 1), p. 4.

12) 三角債는 판매회사가 제조회사에, 제조회사는 원자재 공급회사에 대금지불을 채납하는 형태의 부채로 1996년 말까지 약 8천억元に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Condemned to live China’s great contradiction,” *The Economist*, December 14, 1996, p. 72.

13) 중국은행들은 총대출금의 80~90%를 국유기업에 대출해 주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에는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비중을 더욱 확대해 왔음. 1993년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금이 5,000억元에서 1996년에는 1조元으로 증가하였음.

- 전인대 개최 직전에도 중국은 국가재정 위기를 타개하고 국유기업 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2,700억원(약 320억달러)에 달하는 국채발행 계획을 발표하였음.
- 「政府工作報告」에서 천명된 바에 따르면,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조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우량기업간 합병을 유도하여 대기업을 육성,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
 - 장기간 적자상태를 지속하여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파산조치를 단행함.
 - 대형 국유기업에 대한 재무감독을 강화하여 기업 부실화를 예방함.¹⁴⁾
 - 국유기업을 점차 주식합작제로 전환함.¹⁵⁾
- 국유기업 개혁과정에서 잉여노동자 정리해고(下崗)가 불가피한 바, 대량 실직자를 양산하여 사회불안이 야기될 수 있음.
 - 1억 7천만명에 이르는 도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중국의 국유기업은 1997년까지 1천만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였으며, 향후 3년동안 1천만명이 더 해고될 전망이다.

14) 朱鎔基는 총리취임 직후 500개 적자 국유기업에 감사반을 파견하는 한편, 적자 국유기업 책임자에 대한 경질방침을 밝힌 바 있음.

15) 중국은 국유기업에 주식제를 도입하되, 외국 투자자가 소유할 수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25% 이내로 제한할 방침임.

- 1억에 달하는 농촌지역 유희 노동력과 정부기구 개혁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실직자들을 포함할 경우, 향후 실업문제는 중국사회 안정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이에 따라, 중국은 실직자 재취업, 재훈련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시 실업률을 3.5% 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음.
 - 중국은 해고 노동자 재취업과 직업훈련을 돕기 위해 175억원을 1998년도 정부예산으로 배정하였음.
 - 이번 전인대에서 노동·사회보장부를 신설한 것도 실업대책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임.
- 아울러 중국은 실업대책 차원에서 「고성장, 저물가」정책을 실현한다는 원칙하에, 경제성장률을 8%대로 유지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억제할 계획임.

3. 금융체제 개혁

- 1997년말 이래 동남아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아시아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비록 동남아 금융위기가 아직 중국의 금융체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지만,¹⁶⁾ 동남아국가 통화의 평가
- 16) 중국은 단기채 비중이 10%대에 불과하고, 1,40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외화

절하로 수출 감소, 노무수입 감소, 외자도입 감소 등이 예상된다.

- 중국경제 발전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고 있고 외자도입이 없이는 막대한 시설투자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외 수출과 외자도입이 현저하게 감소될 경우 중국의 금융부문을 포함한 중국경제는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임.

- 1998년 1/4 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계획에 못미치는 7.5%에 그쳤음.

- 따라서 중국은 최근까지 개방을 반대해 온 보험시장을 외국에 전격 개방함으로써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한편,¹⁷⁾ 「전국금융공작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은행의 금융조절·통제 기능과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체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을 확정하였음.

-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의 금융시장 개방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서도 중국은 열악한 금융체제를 국제화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음.

- 한편, 중국은 미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대처하고 「세계무역기구」 가입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까지는 인민폐를 평가

를 보유하고 있음. 중국은 1978년 이래 3,600억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외자를 도입하였으나, 이중 85%가 장기채이며,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임.

17) 「文匯報」(香港), 1998. 4. 8.

절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수출 저하와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1999년부터는 인민폐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정도인 바, 8%의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10% 이상의 수출증대가 요구되며,
- 이를 위해서는 약 20% 정도의 인민폐 평가절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4. 제한적인 정치개혁

- 중국은 「4개 기본원칙」을 견지하면서 개혁을 추진해 왔는 바,¹⁸⁾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장점을 대폭 도입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개혁을 허용해 왔음.
- 제한적인 정치개혁 노선은 안정기조 하에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으나, 최근에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등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건설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정치개혁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18) 「4개 기본원칙」은 사회주의노선 견지, 공산당독재 견지, 무산계급독재 견지, 마르크스·레닌·모택동사상 견지임.

- 이에 따라 중국은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와 불만을 제도권 내에서 해소하기 위해 전인대 기능 강화를 모색하고, 국민들의 참정을 일부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국민의 참정권 허용과 관련, 중국은 村 단위 인민대표를 주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있으며,¹⁹⁾ 공산당과 국무원이 제의한 안건에 대해 전인대 대표가 독자적으로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韓杼濱 신임 최고인민검찰장 내정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 65%의 전인대 대표만이 찬성표를 행사하였음.
 - 張思慶 전임 최고인민검찰장이 발표한 공작보고서에 대해서도 2,893명의 전인대 대표중 845명이 반대표를 행사하고, 447명이 기권하였음.
- 또한 중국은 「差額選舉」를 실시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 주고 있음.²⁰⁾
 - 이 같은 선거실시로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추천한 후보가 낙선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19) 1987년 전인대가 「촌민위원회조직법」을 제정·공포한 후부터 중국의 일부 현과 향의 기층단위에서 간부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있음. 그러나 도시지역에서는 직접선거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

20) 「差額選舉」는 선출할 인원 보다 많은 후보자 등록을 허용하는 선거방식임. 중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差額選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彭偉祥, “人大代表如何產生?” 「文匯報」(香港), 1998. 2. 20 참조.

- 중국은 이러한 선거방식이 부패하고 무능한 당·정간부를 척결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고자 함.
- 중국헌법 제87조 규정에 따라 李鵬 총리를 주용기로 교체하였는 바, 이 점도 중국정치의 제도화 진전을 의미함.
 - 毛澤東시대에는 周恩來가 1976년 사망할 때까지 줄곧 총리직을 수행하였음.
- 사회주의 계획경제 요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됨에 따라 중국에서 중장기적으로 공산당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반면, 전인대는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기구로 탈바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이번 전인대 폐막 당일 신임 朱鎔基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1989년 天安門사건에 대한 당중앙의 결정이 적절했다고 밝혔는 바, 중국이 단기간내에 다당제 등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움.

IV. 중국의 한반도정책 전망

1. 평화협력지향적 외교노선 견지

- 이번 전인대에서 중국지도부가 실무 전문관료들로 상당부분 충원되었고, 중국이 개혁정책을 가속화할 방침을 표명하였는 바, 향후 중국의 대외정책은 보다 평화지향적이고 협력지향적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지도부가 鄧小平 사후 중국을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외정책 자세는 보다 타협적인 모습을 보일 것임.
 - 개혁정책을 가속화하여 현대화 건설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주변환경의 안정유지와 서방 선진국과의 협력증진에 대외정책의 주안점을 둘 것임.

-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15차 당대회 이후 공산당 기관지에 발표된 대외정책 기조와 이번 전인대에서 공표된 대외정책 지침을 통해서도 잘 나타나고 있음.²¹⁾
 - 현대화 건설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지

21) 劉華秋, “中國始終不渝地奉行獨立自主的和平外交政策,” 「求是」, 1997年 第23期 (1997. 12. 1), pp. 2~9;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8. 3. 6.

- 패권주의 반대
- 다자외교 무대에 적극 참여
- 公益外交 추구²²⁾

2. 두 개의 한국정책 추진

- 향후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에 최우선을 두는 방향으로 한반도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임.
 - 중국과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는 한반도는 과거 해양세력이 중국을 침략하는데 징검다리로서 활용되었는 바, 한반도의 안정은 중국의 안정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은 한반도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경우, 중국 동북삼성 지역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고 중국과 미·일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중시하게 될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정책을 전개할 수밖에 없을 것임.
 - 즉,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변화를 의미하는 통일보다는 분단의 안정적인 관리에 우선권을 두는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임.
 -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된 「政府工作報告」에서도 중국은 “조선(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한국과는 호혜협력관계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음.

22) 중국이 추구하는 「公益外交」는 주변국과 단기간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을 당분간 덮어두고 공동개발을 추구한다는 것임.

-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정치·안보관계 구축을 모색하면서도,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최소한도의 경제적·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중국은 1997년 북한에 대해 공개·비공개분을 합하여 80만톤 가량의 식량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998년에도 이미 상당량의 식량과 비료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²³⁾

- 또한 중국은 동북아질서가 특정 강대국(미국)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인 바, 두 개의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 할 것임.
 - 이와 관련, 중국은 한국과 미국과의 협상시 북한과의 관계를 활용하여 입지를 강화해 왔음.
 -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북한을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

- 아울러 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미국요인에 의해서 상당부분 영향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향후 중·미관계 변화 추이는 중국의 한반도정책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 1997년 10월 江澤民의 미국방문과 금년 6월말 클린턴의 중국방문을 앞두고 중·미관계가 호전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더욱 지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23) 1998년 4월초에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 10만톤의 곡물과 2만톤의 화학비료 제공을 약속하였음. CCTV, 1998. 4. 13.

- 중국은 최근들어 다자외교 무대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바, 한반도 평화문제 논의를 위한 「4자회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임.
 - 중국은 공개적으로는 한반도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간에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나, 북한이 미국과만 평화문제 논의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4자회담」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은 한반도문제 논의과정에서 배제되는 것보다는 자신이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임.
 - 최근 중국이 강대국과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등 「협력외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4자회담」에 긍정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고 있음.

-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평화·화해·협력정책을 적극 지지할 것임.
 - 錢其琛 외교담당 부총리는 전인대 회의 기간중에 개최된 기자회견시 한국의 남북기본합의서 체제 복원을 통한 대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²⁴⁾

24) 「人民日報」, 1998. 3. 13.

V. 고려사항

- 중국정치는 제도적 요인보다는 지도자 개인의 영향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바, 한국은 중국의 새로운 실세로 부상한 朱鎔基 총리와 胡錦濤 국가부주석과의 인적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함.
- 중국은 전인대 이후 대대적으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한국의 각 정부부서들은 과거 중국정부 부서들과 구축하였던 접촉채널을 조정·개편해야 함.
 - 중국의 행정개혁과 관련한 경험과 지식을 상호 교환하는 것도 중국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은 군대 편제를 3군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체제에서 4군총부(총장비부 신설)체제로의 개편방침을 확정하였는 바,²⁵⁾ 한국은 총장비부의 조직과 동향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해야 함.
 - 중국은 제한적이거나 북한에게 군사장비와 부품을 제공하고 있는 데, 그 실무 부서가 바로 총장비부가 될 것이기 때문임.
- 중국이 북한사회주의 체제유지에 우선을 두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한국은 중국을 통한 북한변화 유도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

25) 최근까지는 장비부를 총참모부 산하에 배속시켜 왔음. 『解放軍報』, 1998. 4. 6.

- 중국에게 과도하게 중재역할 수행을 요구할 경우, 중국과의 협상테이블에서 한국의 입지가 약화될 수 있음.

-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지역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바,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지역안정 및 중국의 안정과 발전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킴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유도해야 함.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이우영 김영윤 외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외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헌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 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중·북관계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외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운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著	4,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i>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6 (1997)</i>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604, 901-2559, FAX:901-2547)

中國의 대내개혁 동향과 대한반도정책 전망

統一情勢分析 98-01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統一環境研究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7(代), FAX : 901-2543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8년 4월 일

發行日 1998년 4월 일
